

6.4. 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에게 제안하는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위한 동물보호정책

공약 제안 단체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동물자유연대  
동물을 위한 행동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핫핑크돌핀스

## - 목 차 -

###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위한 동물보호정책 제안

#### □ 정책 별 제안 내용

##### 1. 서울시 유기동물 직영 보호소 설치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 2. 공중보건과 식품안전을 위한 재래시장 내 생동물 즉석 도축 후 유통 근절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 3. 집중 TNR 지역 선정 및 시행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 4.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 활성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 5. 서울시 산하 동물원 개선안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 6. 해양수산부, 제주도와 협의체 구성해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 방류사업 협조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7. 동물보호행정 공시제도 시행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8.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단속을 위한 수도권과의 동물  
보호행정 협력체계 구축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9. 생명존중 패러다임으로서의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1) 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3) 공약의 제안

☐ 공약 제안 단체

#### 6.4. 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에게 제안하는

###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위한 동물보호정책

#### 공약 1 서울시 유기동물 직영보호소 설치

- 권역별 직영보호소 설치로 유실 동물의 귀가를 제고, 봉사 활동, 입양을 위한 접근성 강화로 동물보호 및 부족 재정 보완

#### 공약 2 공중 보건과 시민 정서에 반하는 생동물 즉석 도축 판매 행위 금지

- 중앙시장, 경동시장 등 서울시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개 등을 즉석에서 도살해서 판매하는 업소 근절

#### 공약 3 집중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trap-neuter-return) 지역 선정 및 시행

- 길고양이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인 tnr을 시행해 개체수 조절의 성과 평가. 길고양이를 둘러싼 시민 갈등 완화

#### 공약 4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 활성화

-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이용 시범 사업 실시
- 시민대상 동물복지인증축산물 홍보

#### 공약 5 서울시 산하 동물원 개선안

- 낙후된 시설 보수
- 동물보호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원 동물복지기준 마련, 개체수 조절(번식), 동물 수입, 양도, 양수 시 동물복지기준에 의한 평가 선행
- 돌고래 등 동물원 전시가 야생 개체수 보존에 영향을 미치고 감금상태에서 극도로 고통을 받는 등 사육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해 반입 중단 선언

#### 공약 6 해양수산부, 제주도와 협의체 구성해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 방류사업 협조

- 검찰이 몰수하고 서울시에서 임시 보호중인 태산, 복순이의 방류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예산 수립 요청 방류 협력 체계 구성

#### **공약 7 동물보호행정 공시제도 시행**

- 동물조례 및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행정의 실행결과 및 동물보호 종합계획에 따른 실천 내용과 그 평가를 공시하고, 구체적 내용을 간략한 백서의 형태로 발간

#### **공약 8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단속을 위한 수도권과의 동물보호행정 협력체계 구축**

-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생산업의 현황 파악(전수조사)과,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생산업을 병행 하는 곳 계도 조치
-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감시반에 의한 감독을 시행하는 등 불법업체와 비인도적 운송에 대한 단속

#### **공약 9 생명존중 패러다임으로서의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서울시 인권조례와 같이 공개적이고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1. 서울시 유기동물 직영 보호소 설치

### 1) 현황 및 문제점

- 핵가족화,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는 전체 인구의 17.9%에 달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유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함. 일 년에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되며, 신고되지 않는 개체수와 민간운영 보호소에 유입되는 개체수를 고려할 때는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총 13,563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써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2012년 서울시에서 운영된 유기동물 보호소는 총 90개며, 이 중 직영 보호소는 단 한 곳도 없이 모두 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됨. 위탁 계약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및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관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질병 감염, 방치로 인한 폐사율 높음.  
(별첨: 2012 동물보호 조사현황 공표, 2013. 농림축산식품부)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유기동물 발생은 해당 동물의 안전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직결되며, 구조, 보호, 처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인수제도 등의 도입으로 유기동물수를 절감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으로 구조 및 관리 업체 위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방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시민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권장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 안락사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1년부터 전남대학교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협약을 맺어 직영 보호소를 설립. 2012년 기준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 안락사 비율은 18%, 폐사 비율은 7%로 나타나 같은 기간 서울시 안락사 비율 29%, 폐사 비율 25%인 데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집계됨.

### 3) 공약의 제안

- 서울시 유기동물 직영보호소 설치
  - 권역별 직영보호소 설치로 유실 동물의 귀가율 제고, 봉사 활동, 입양을 위한 접근성 강화로 동물보호 및 부족 재정 보완

## 2. 공중보건과 식품안전을 위한 재래시장 내 생동물 즉석 도축 후 유통 근절

### 1)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서울 시내 주요 재래시장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살아있는 닭·개 등을 즉석에서 도살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유통하는 것은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혀 공중보건과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서울시에 따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쇼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2012년 155억 지원)과 함께 백화점·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음을 밝힘.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도살해 판매하는 관행은 생명존중이 날로 높아져가는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함. 따라서 도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복지에 위해하고, 동물학대 발생 위험을 증가시킴.
- 이번 2014년 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항체가 개에서 발견된 사례가 발생함. 이는 조류독감이 포유류에게 감염된 국내 첫 사례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중간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점이 입증됨. 가축전염병이 살아있는 동물을 트럭 등으로 이동시키며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닌 정기적인 단속으로 재래시장이 가축전염병 확산의 근원지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불법도축을 하는 상인이 적발되어도 벌금을 내고 영업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3. 공약의 제안

- 공중 보건과 시민 정서에 반하는 생동물 즉석 도축 판매 행위 금지
  - 중앙시장, 경동시장 등 서울시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개 등을 즉석에서 도살해서 판매하는 업소 근절

### 3. 집중 TNR<sup>1)</sup> 지역 선정 및 시행

####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화로 길고양이 서식지가 없어지고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지자 쓰레기봉투를 뜯거나 발정으로 인한 소음 발생, 공동주택의 지하실,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서울시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 발정이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부터 서울시 모든 구에서 TNR 시행 시작.
- 현재 서울시의 TNR은 각 구에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시행 중으로 최근까지도 위탁업체에서 서류를 조작해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TNR 대상이 아닌 새끼고양이까지 포획해 수술하고 방사해 죽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
-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오는 일부 지역의 길고양이들에 대해서만 TNR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체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지자체 TNR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동물단체, 수의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TNR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TNR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TNR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미국 텍사스 A&M 대학 캠퍼스에서 1998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TTVARM(trap-test-vaccinate-alter-return-monitor/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하고 제자리 방사를 하는 기존의 TNR에 백신접종, 사후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길고양이 관리 방법)을 시행한 결과 시행 첫 해에는 123마리를 포획한 것에 비해 두번째 해에 포획된 개체수는 35마리에 불과. 포획된 고양이 중 새끼고양이를 비롯한 32마리의 고양이를 입양 보냈는데 TTVARM 시행 후 2년째에 발견된 새끼고양이는 세 마리에 불과했음.
-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거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2006년부터 길고양이 TNR을 시행.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성묘의 90% 이상이 중성화 완료되어 시행 초기 90-100마리였던 길고양이는 현재 70마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간의 갈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3)공약의 제안

- 집중 TNR 지역 선정 및 시행
  - 길고양이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인 TNR을 시행해 개체수 조절의 성과 평가. 길고양이를 둘러싼 시민 갈등 완화

---

1)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킨 뒤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개체수 조절 방식. 외국에서는 이미 2-30년 전부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TNR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 북미, 유럽, 대만, 일본 등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



#### 4.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 활성화

#####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들이 소비하는 축산물 99%가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생산성 위주 사육방식은 성장호르몬과 항생제 등 과도한 약물 투여로 식품 안전을 위협. 열악한 사육환경은 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가축전염병을 비롯한 질병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킴.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1/5이 거주하는 서울시는 그만큼 많은 축산물이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농장동물의 사육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동물복지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에서 정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의 참여가 부족하고 소비자 인식 또한 낮은 실정임. 동물복지 인증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판로가 없어 동물복지 달걀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과도한 육류 소비를 지양하고 채식을 장려하고자 2013년부터 채식의 날을 운영했으나 참여 기관 41개소 중 11개소(27%)에서 ‘채식의 날’ 폐지 또는 ‘육식의 날’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해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축산물 주요 소비 도시인 만큼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권리로 동물복지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요구.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이 바탕 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동물복지축산물 이용 사례는 생산자의 안정적인 유통 판로 확보와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해외사례의 경우 호주의 ACT 주는 공공기관 및 학교, 병원에서 사용하는 달걀을 케이지-프리(cage-free) 달걀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와 BC에 있는 17개의 도시에서는 동물복지 달걀 생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직접 공공기관에서 케이지-프리 달걀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식당, 소비자, 유통업자, 판매자별로 동물복지 달걀 이용을 적극 권장해 캐나다에 사육되는 산란계 복지 증진을 유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2014년 하반기 동물복지축산물 온라인 판매관 설치 예정임. 온라인 판매 수수료 6% 인하 진행, 프로모션 등을 통해 생산자의 지속적인 온라인 소득기반 마련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계획하고 있음. 동물복지축산물 홍보 수단의 하나로 활용 가능.

##### 3) 공약의 제안

-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 활성화
  -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이용 시범 사업 실시
  - 시민대상 동물복지인증축산물 홍보

## 5. 서울시 산하 동물원 개선안

### 1)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지자체 공영 동물원이 시설 확충 및 보완의 미비로 낡고 노후하며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충족할 수 없는 환경임. 사육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의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물원에서 동물 폐사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동물원의 관리와 사육 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2013년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을 발의했고, 최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일부 동물 종에 대한 사육시설 기준을 마련 중.
- 서울대공원에서 번식한 개체들이 시설이 열악한 민영동물원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함. 2012년 부도 직전인 원주 소재 민영동물원에서 2004년에 서울대공원에서 번식해 거래된 호랑이 크레인이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서울대공원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었음. 그 외에도 서울대공원에서 번식, 지방 민영동물원으로 거래된 호랑이가 야생방사장도 없는 열악한 실내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음.
-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는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의 야생개체수를 감소시키고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과 ▲고속으로 이동하고 무리생활을 하는 종 특성상 인도적 포획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데서 오는 포획방법의 비인도성과 ▲수족관 전시가 동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사율을 급격히 높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건강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을 보는 것은 어린이들이 생명의 존엄성 아닌 오락 대상으로 파악할 가능성 높으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등 직원의 안전과도 직결됨.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동물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실험시설은 현재 동물보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물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음.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위한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됨.
- 국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동물원지침(Secretary of states'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에서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동남아 동물원협회(South East Asian Zoos Association)도 동물윤리와 복지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 윤리/복지위원회의 설치를 주요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 EU 28개국 중 14개국에는 돌고래 수족관이 없으며 코스타리카, 칠레, 스위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고래류 보존에 앞장서고 있음. 지자체로는 2014년 캐나다 밴쿠버가 시립 수족관에서 돌고래 사육 중단을 결정함.

### 3) 공약의 제안

- 서울대공원 동물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
- 동물보호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원 동물복지기준 마련하고, 개체수 조절(번식), 동물 수입, 양도, 양수 시 동물복지기준에 의한 평가 선행
- 돌고래 등 동물원 전시가 야생개체수 보존에 영향을 미치고 감금상태에서 극도로 고통을 받는 등 사육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해 반입 중단 선언. 향후 서울대공원 제돌이관을 3D 해양생태교육관으로 전환

## 6. 해양수산부, 제주도와 협의체 구성해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 방류 추진

### 1)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의 몰수형 판결로 몰수 조치된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4마리 가운데 건강상태가 양호한 2마리(춘삼, 삼팔)는 서울대공원 제돌이와 동시에 방류되었으나, 나머지 2마리(태산, 복순)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즉시 방류가 보류되어 현재까지 서울대공원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음
- 시민단체들은 제돌이 방류 이후 관할기관 해양수산부에 서울대공원 수조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는 몰수된 남방큰돌고래 2마리(태산, 복순)에 대한 예산 마련과 방류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예산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제돌이 방류 사업은 ‘성공적 동물복지 실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방송, 신문 등 관련 기사로 인한 홍보효과는 20개월 간 820억3000만원, 제돌이 방류 사업을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5년간 693억3200만원에 달함. 이는 제돌이 방류 사업에 들어간 서울시 예산 7억5100만원과 비교하면 92.3배의 효과를 거둔 셈으로 서울시가 임시보호중인 남방큰돌고래 방류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예산 수립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과 균형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쇼 돌고래 방류와 돌고래 쇼 중단을 통해 ‘동물은 인간의 이윤을 위해 이용하는 자원이 아닌, 소중한 생명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

### 3) 공약의 제안

- 검찰이 몰수하고 서울시에서 임시 보호중인 태산, 복순이의 방류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예산 수립 요청 방류 협력 체계 구성

## 7. 동물보호행정 공시제도 시행

### 1) 문제점과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동물보호법 및 조례에 정한 내용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시민, 동물단체들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조례6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조례9조에 의한 감독의 내용, 제20조에 따른 출입검사의 시행여부 등이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움.
- 서울시의 경우, 조례5조에 따라, 동물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바. 종합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실천내용들에 대해서 동물복지위원회 등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가 공시될 필요성이 있음.
- 2012년, 2013년의 서울시의 동물보호행정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은 물론 동물단체에서도 세부적인 실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 개인 수준의 정보 공개 청구로는 한계가 있음.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동물보호법 45조는 동물의 실태와 지도 감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 결과를 법률로 알리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기동물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45조의 정보공개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에서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의 등록현황, 조례9조,2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독, 시행령 14조에 따른 동물감시원의 사육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등 동물보호법 및 조례에 따른 동물행정의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 공시제도는 녹색기업 등 환경분야나 학교행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 중.

### 3) 공약의 제안

- 동물보호행정 공시제도 시행
  - 동물조례 및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행정의 실행결과 및 동물보호 종합계획에 따른 실천 내용과 그 평가를 공시하고, 구체적 내용을 간략한 백서의 형태로 발간

## 8.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단속을 위한 수도권과의 동물보호행정 협력체계 구축

### 1) 현황 및 문제점

-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과 동물학대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로 2012년 2월부터 동물생산업 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현재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서울시에 등록된 동물생산업체는 4개에 불과. 판매업과 번식업을 병행하는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판매업 신고가 되면 생산업 신고 필요성을 모르고 무분별한 번식을 자행하는, 일명 개미농장이 성행.
- 현행법에 규정된 생산업 관리 기준에는 100마리의 동물 당 1명의 관리 인원만 두면 사육 두수에 제한이 없어 생산업체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관리 불가능. 번식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은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다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 살처분되거나 식용으로 팔려감.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무분별한 번식을 통해 태어나 면역력이 형성되지도 전에 판매된 동물이 구입 직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폐사하는 사례에 대해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음. 서울시는 국내 최대 소비처로서 동물보호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번식업체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지만, 서울시에는 번식업체가 거의 없음.
- 반려동물 번식업체 뿐 아니라 불법적인 동물 운송, 도살 등이 주요 공급처인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단속 권한이 없어 원활한 조사와 단속이 어려움.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미등록 반려동물 생산업의 현황 파악(전수조사)을 실시하고, 판매업만 등록하고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업 등록 제도 조치.
-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동물 복지에 반하는 열악한 환경 증진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시행.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 17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도적인 동물 운송,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 공급과 유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경기도와의 행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운송, 도축에 대한 단속을 이루어야 함.

### 3) 공약의 제안

- 불법 반려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와 단속을 위한 수도권과의 동물보호행정 협력체계 구축
  -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생산업의 현황 파악(전수조사)과,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생산을 병행 하는 곳 제도 조치
  -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감시반에 의한 감독을 시행하는 등 불법업체와 비인도적 운송에 대한 단속

## 9. 생명존중 패러다임으로서의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1)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홍보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그 기초가 되는 패러다임이 부재.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기초가 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홍보해 향후 그 기준을 바탕으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동물보호조례 제 12조에 동물생명존중헌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교육, 설득할 수 있는 시민 규범이 필요.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각국의 인권의식을 올리고 법제화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서울시 인권조례에 의해 추진 중인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할 때에도 공개적이고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 3) 공약의 제안

- 생명존중 패러다임으로서의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서울시 인권조례와 같이 공개적이고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공약 제안 단체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사랑실천협회

(사)동물자유연대

동물을 위한 행동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핫핑크돌핀스